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3년 7월 1차



주요 현안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법 시행 시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입양 진행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06.30]
https://www.mohw.go.kr/react/al/saI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770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 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내용 포함

참고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23.06.30]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cyNTY5JTJGYXJOY2xWaWV3LmRvJTNGcGFzc3dvcmQIM0QI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12cmdzRW5kZGVtdHlIM0QIMjZpc1ZpZXdnYW5lJTNEZmFsc2UI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IM0QIMjZzcmlNoQ29sdW1uJTNEJT12c3JjaFdyZCUzRCUyNg%3D%3D>

여성가족부,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2022년 만 19세 이상 남녀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7.6%(여성 9.4%, 남성 5.8%)로 2019년 조사 결과(전체 8.8%, 여성 10.9%, 남성 6.6%)보다 감소하였고, 조사 대상 중 여성은 정서적 폭력 6.6%, 성적 폭력 3.7%, 신체적 폭력 1.3%, 경제적 폭력 0.7% 순으로 피해 경험(중복 응답 포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7.04]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9-8sRU9mm3UjApH75nRHZKS.mogef20?mid=news405&bbtSn=709380

여성가족부,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발표

☑ 여성가족부는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평가」 실시 결과를 발표함.

- 총 35개 기관이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전체 최우수 기관인 경북 경산시 서비스기관은 이용자 만족도, 아이돌봄미활동률, 이용가정 증가율, 예산집행의 충실성, 지속적 서비스 점검(모니터링) 환류 등 대부분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7.05]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9-8sRU9mm3UjApH75nRHZKS.mogef20?mid=news405&bbtSn=70938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는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 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2023년 7월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 사용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07.11]
https://www.mois.go.kr/fi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ltEZCf3-4i9dtmcqfCgFF7R-.node30?bbsId=BBSMSTR_00000000000008&nttId=101620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돌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3-06-26	아동의 헌법상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를 하고 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는 등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생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호(안 제44조제4항제3호, 제44조의3, 제44조의4 신설 및 제46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2023-06-29	출생 신고 시 혼인 중·혼인 외 출생 구별을 폐지하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있도록 출생 신고 의무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혼외출생자에 대한 차별의 소지 제거(안 제46조, 제5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023-06-29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이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기본적인 정보를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밖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생신고 시 제출하는 출생증명서 대체서면의 범위 확대(안 제44조의3, 안 제44조의4, 안 제44조제4항제3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3-06-29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고,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입양하는 등 그간 「민법」의 적용을 받던 입양 중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국가를 이동하는 경우라면 동 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아동의 본국과 양부모의 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조속한 정착 지원(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21조, 안 제16조, 안 제20조, 안 제26조, 안 제31조)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3-06-29	‘아동 최선의 이익’에 근거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 지난 2013년 서명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입양 제도는 새로 제정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율하게 되므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국내입양으로 한정(안 제1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및 제39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31조, 안 제33조, 안 제37조)

가족·돌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1인)	2023-06-30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보호자가 영유아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지 등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양육수당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안 제34조의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3인)	2023-07-03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법원이 지자체장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아동의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이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책임 강화(안 제10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2023-07-0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육아휴직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시키며,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6개월보다 적은 기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6개월보다 적은 기간을 사용하도록 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새로운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엄중한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근로자 육아휴직등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안 제19조, 제19조의2, 제37조 및 제39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2023-07-05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보육종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등의 계획을 세워 미리 보호자와 협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영유아의 권익보호 강화(안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2023-07-05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치원의 폐쇄 시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응 (안 제8조제4항 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2023-07-07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안 제7조제1항, 제17조제4항)

건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3-06-29	우리나라도 여성의 재생산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과 국가적 차원의 출생률 제고를 위하여, 임신을 원하는 비혼인 여성의 경우도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현행 '난임'의 정의규정상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에서의 '정상적인'이라는 표현은 의학적·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모호하고 차별적인 용어인바, 해당 규정을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성생활'로 개정함으로써 합법성의 원리 및 명확성의 원칙 확립(안 제2조제11호·제13호 및 제1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2인)	2023-07-03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난임치료를 위한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2023-07-06	현행법에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며 적절한 기간의 휴가사용권 보장(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1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2023-07-06	현행법에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며 적절한 기간의 휴가사용권 보장(안 제18조제1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2023-07-06	현행법에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며 적절한 기간의 휴가사용권 보장(안 제74조, 110조, 114조 및 116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2인)	2023-07-0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 지원(안 제10조)

젠더 폭력· 안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2023-06-27	출산에 조력한 타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모의 출생신고 증명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기관 외 출생신고의 요건을 완화하며, 나홀로 출산의 경우에 유전자검사 등 증명서 발급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신고 절차와 방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하도록 하여 출생신고를 높여 영유아가 학대, 방임, 살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안 제46조제3항제2호, 안 제44조제4항제1호, 안 제44조의2제4항 및 제5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3-06-29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2조제1항제13호 신설, 안 제53조의2, 안 제10조의2제2항제9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2023-07-0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강간등의 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 예방(안 제4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등 10인)	2023-07-05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특례 규정을 정비(안 제2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등 10인)	2023-07-05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그 성질상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 특례 규정을 정비(안 제16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등 10인)	2023-07-05	현행법은 피해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그 성질상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 특례 규정 정비(안 제3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2023-07-06	‘장애인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과 같은 예시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적용대상에 대한 명확성을 강화하여 수범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향상(안 제6조제7항)
법·계획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2023-06-27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안 제51조의2 신설)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KWDI 연구보고서] 지역별 산업별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	6.27	연합뉴스	성별임금격차 40% 넘는 곳은...농업의 전남, 제조업의 울산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6112800530?input=1195m
		서울신문	여성은 남성 월급 60%밖에 못 받는 곳, 전남·울산... 이유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27500007
		문화일보	남녀 임금격차 40% 넘게 벌어진 곳 어디?...“농업의 전남, 제조업의 울산”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62701039910226004
		MBN	남녀 임금 격차 40% 넘는 지역은 '전남·울산'...이유는?	https://www.mbn.co.kr/news/society/4941174
		경향신문	성별임금격차 40% 넘는 지역 어디?...제주 가장 적어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6271121001
		세계일보	“전남·울산 여성 월급, 남성의 60% 수준”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27520576
		KBS	울산, 성별 임금 차 전국 최고 수준...여성 종사자 비율 최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9857&ref=A
온라인 폭력과 여성의 공적 참여: 한국의 현황과 대응 방안	6.28	여성신문	“여성기자 향한 언어 성폭력과 외모 비하, ‘괴롭힘’ 아닌 ‘폭력’이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838
		한겨레	미셀 리·박지현에 대한 온라인 폭력, 여성 전체를 위협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97941.html
[KWDI 연구보고서]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7.8	MBN	불법 촬영 재범률 74%...근절 방법 없을까 [사건 인사이트]	https://www.mbn.co.kr/news/society/4944676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7.8	중앙일보	부모·병원에 출생신고 말하지 말고, 국가가 직접 등록해야	송효진 연구위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5721

유관기관 연구동향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국회입법조사처)

익명 및 비밀출산 관련 논쟁의 지점을 소개하고 대안 모색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2023.07.06]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390>

유관기관 연구동향



성별 연금격차의 현황과 시사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별 연금격차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 2023.07.10]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55675>

유관기관 연구동향



서울시 양육자의 정신건강·양육 스트레스 실태분석과 지원방향(서울연구원)

양육자의 정신건강과 양육 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과제 제안

참고자료

-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07.10]
<https://www.si.re.kr/node/67467>